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 판결에 의해
증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510, 2023.10.18

■ 질 의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회 신

-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 2.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이하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기준법무법인-146, 2023.12.14

■ 질 의

- A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다만,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 이후 2017.11월경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함
- * 농어업경영체법 §4 농어업 · 농어촌에 관련된 용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질의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적용 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요건인지 여부
- (1안)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2안)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함

■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867, 2024.01.24

■ 질 의

-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에 있어 양도인인 신청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연수익(부채계정)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평가금액을 회계상 장부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계상 장부금액에 세무상 유보를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 한국지점인 A가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

는 것입니다.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총당할 수 없음

서면징세-4602, 2023.12.08

■ 질 의

- 회생절차 종결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과 총당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징수의 유예기간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 그 국세환급금을 총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